

일본정부의 코로나19 정책 고찰

호사카유지 (세종대학교)
(hosaka@sejong.ac.kr)



국문요약

아베정권은 코로나19 대책으로 봉쇄, 클러스터 대책, 긴급사태선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시했다. 충분한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았던 아베정권은 7월 들어 바이러스 검사 확대로 대책을 변경했지만 전문 의료진들 사이의 이견으로 검사는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아베정권은 5월25일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해 경제활동을 단계적으로 허용했다. 감염이 다시 확대되었지만 중증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베정권은 경제활동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여행이나 음식점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도교를 제외하여 전국적으로 'GO TO 캠페인'을 시작했다. 아베총리는 각종 스캔들에 대한 대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책에는 미흡했고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맞이해 방어와 공격 면에서 미흡한 아베정권이 2020년 내에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실시하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제어 : 코로나19, 봉쇄, 클러스터, 긴급사태, PCR검사

I. 들어가는 말

본고는 일본 아베정권의 코로나19 정책을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둔다. 비전통적인 안보 분야에서 전염병이 자치하는 중대성의 비율이 오늘날처럼 높아진 것은 오랜만의 일이다.

각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전쟁을 지르고 있다. 코로나19에는 아직 확실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 그리고 코로나19는 감염이 되어도 무증상 환자가 많기 때문에 누가 감염되었는지 알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즉 게릴라성이 강하다. 게다가 전파력이 세기 때문에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자각이 없는 무증상 환자가 주변에 바이러스를 전파시킨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코로나19는 변이하여 이미 세계에서 몇 가지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시된다.

코로나19를 적군으로 비유하자면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자신들의 동지들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 게릴라부대가 공격을 하면서 자신들의 부대를 팽창해 나가는 형태다. 비전통적인 안보분야에서 현재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와 전쟁을 차르고 있는 셈이다.

본고에서는 일본정부의 코로나19 정책을 살펴본다. 그 관점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어와 제거정책, 일본정부의 조직과 지휘관들의 능력 등에 분류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일본정부의 코로나19 정책을 논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재까지 나온 논문은 주로 의료적 관점에서 코로나19의 특성을 분석한 것들이므로 본고와 같은 관점에서 정부대책을 분석한 선행논문은 없다.

II. 방어정책-일본인 귀국 대책과 미즈기와(봉쇄) 대책

1. 중국 후베이성 거주 일본인 귀환 작업

일본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확인된 것은 2010년 1월 15일이었다. 이후 일본정부는 1월29일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추정된 중국 우한과 후베이성에 거주하는 일본인들 206명을 전세기편으로 일본 국내로 피신시켰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코로나19 방어에 비교적 신속하게 착수했다. 그러나 전세기로 귀국한 사람들이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후 일본정부의 대처는 문제가 많았다.

먼저 206명 중 2명이 바이러스 검사(이하, PCR검사 혹은 검사)를 거부해 귀가해 버렸다.¹⁾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2명은 수용시설로 돌아왔으나 정부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이것은 정부에 명확한 귀가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마음대로 움직인 상황이 연출되어서 일어났다.

206명 중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은 의료시설로 이송되었고 결국 191명이 수용시설로 마련된 치바(千葉)현의 호텔로 머물게 되었는데 그 호텔에는 1인실이 140개밖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결과 1인실이 51개가 모자라 2인 1실이나 3인 1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2인실을 사용한 사람들 중 2명이 양성반응을 보였다.²⁾ 2명은 서로 다른 방에 수용된 사람들이었고 그들과 같이 방을 쓴 사람들은 감염이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우한에서 온 전세기 제1편은 아베정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른다는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일본정부는 2월 17일까지 총 5편의 전세기를 우한에 보냈고 후베이성에서 829명이 일본에 귀국했다.

2. 중국 외의 해외 거주 일본인 귀국 작전

일본의 외무성이 해외에 있는 일본인의 귀국을 지원했다.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외상은 5월 29일의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해외에서 발이 묶여 있던 일본인 약 1만명이 그동안 일본에 귀국했다고 밝혔다(니혼케이자이신문 2020/05/29).³⁾

그러나 아직 해외에 귀국 희망자는 27개국에 약 280명이 존재하고 이들 중 6월 첫 번째 주까지 200명 이상이 귀국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니혼케이자이신문 2020/05/29).⁴⁾

외무성은 그동안 일본인들이 체류하는 국가의 정부나 항공사에 임시편이나 민간 전세기를 띄어달라고 요청해 왔다. 그 결과 페루와 우즈베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폴란드 등 출국이 어려웠던 나라들에서도 대다수의 일본인들이 귀국했다. 비용은 자기 부담으로, 탑승자의 머릿수로 전체비용을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1월말부터 시작된 일본인 귀국은 약 4개월로 거의 완료되었다.

1) FNNプライムオンライン, 출처: <https://www.fnn.jp/articles/-/24104> (검색일: 2020. 06. 30.).

2) FNNプライムオンライン, 출처: <https://www.fnn.jp/articles/-/24104> (검색일: 2020. 06. 30.).

3) 출처: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9733360Z20C20A5EA3000/> (검색일: 2020. 06. 30.).

4) 출처: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9733360Z20C20A5EA3000/> (검색일: 2020. 06. 30.).

3. 크루즈선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 사건

2020년 2월 3일 밤 일본 요코하마항에 입항한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안에서 감염이 확산되었다. 탑승자는 승무원과 승객 모두를 합해서 약 3,700명이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승객과 승무원을 크루즈선에서 하선시키지 않고 기본적으로 14일간 배 안에 격리시켰다. 일본정부는 바이러스를 일본에 상륙시키지 않는 작전을 ‘미즈기와 작전’이라 불렀다. 미즈기와(水際)란 물가를 뜻한다. 말하자면 물가에서 적군의 상륙을 봉쇄한다는 작전인데 이것은 전쟁 시에 사용된 군사용어이기도 하다.

미즈기와작전은 적군 상륙 저지 작전인 셈이다. 그러나 이것이 역효과가 되어 좁은 선내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말았다.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 사건은 일본 국내를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해 선내에 있는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작전이 되었다. 이때 일본의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국내외적인 비판이 일어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2020년 8월 11일 현재 크루즈선 관계로 감염된 사람은 합계 712명이었고 사망자는 13명이었다(니혼케이자이신문 2020/08/01).⁵⁾

일본정부는 크루즈선의 승객과 승무원을 중증환자 외는 선내에서 14일간 격리한 뒤 2020년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순차적으로 하선시켰다(TRAICY 2020/03/16).⁶⁾ 그런데 이때 일본정부는 하선한 승객들을 격리하지 않고 대중교통으로 자유롭게 귀가시켰다. 일본정부의 설명은 선내에서 14일간 격리했고 그 기간 동안 음성으로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은 귀가시켜도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크루즈선 승객을 자국으로 출국시킨 미국 등은 자국에서 다시 그들을 14일간 격리조치 했다. 일본정부가 대중교통으로 일본 내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귀가시킨 행위는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바이러스의 전파를 도외시한 큰 실수였다. 이후 일본에서는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확대하기 시작되었다.

4. 일본의 외국인 입국제한 정책

바이러스의 국내 침입을 막기 위한 일본의 외국인 입국제한 정책은 먼저 중국의 후베이성 사람들의 입국제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정부는 올해 2월 1일부터 후베이성을 경유하는 외국인들의 일본입국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미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이 중국 전역에서의 입국을 거부했는데

5) 출처: <https://r.nikkei.com/article/DGXMZO55811680Z10C20A2I00000> (검색일: 2020. 08. 11.).

6) 출처: <https://www.traicy.com/posts/20200316148616/> (검색일: 2020. 06. 30.).

비하면 일본의 대책은 미주기와작전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었다. 당시 일본정부는 감염자가 후베이성에 몰려 있는 데다 과도한 입국 제한은 일본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었다(니혼케이자이신문 2020/02/08).⁷⁾

입국제한 지역을 후베이성으로 한정된 것은 당시 감염이나 사망자가 아직 후베이성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중국과 경제면에서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그 이유였다. 일본에서 보면 중국은 최대의 무역상대국이고 중국의 입장에서 일본은 두 번째 무역상대국이다. 사람의 왕래도 활발하여 중국으로부터의 방일 외국인도 2019년 959만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중국인 입국 제한의 확대는 경제의 하강 요인이 된다고 일본정부는 판단한 것이다(니혼케이자이신문 2020/02/08).⁸⁾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이 필요했지만 일본의 방역은 매우 미흡해 초기에 중국에서의 외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당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을 4월에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는 일본정부의 사연도 있었다(니혼케이자이신문 2020/02/08).⁹⁾

Ⅲ. 일본정부의 코로나 대책의 변화

1. 봉쇄정책으로부터 클러스터대책으로의 전환

일본정부는 2020년 2월15일 코로나19의 일본 국내 유행에 대비해 기존의 미즈기와대책(해외입국자봉쇄대책) 중시 자세를 전환하고 검사와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등 중증환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클러스터대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그 배경에는 2월13일 이후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각지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다. 가토 카츠노부(加藤勝信) 후생 노동상은 “지금까지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해 향후 국내 유행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피력했다(시즈오카뉴스SBS 2020/02/15).¹⁰⁾

7) 출처: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5421270Y0A200C2MM0000/> (검색일: 2020. 07. 02.).

8) 출처: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5421270Y0A200C2MM0000/> (검색일: 2020. 07. 02.).

9) 출처: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5421270Y0A200C2MM0000/> (검색일: 2020. 07. 02.).

코로나19가 유행함에 따라 전문가들로부터 이 감염증의 특징으로서 ‘감염한 사람의 80%는 누구에게도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는데 일정 조건을 가진 장소에서 한 명의 감염자가 복수 명에게 감염시킨 사례가 있다’라는 인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인식이 사실이라는 것은 SARS가 유행했을 때 일본에서 진두지휘한 감염증역학 전문가 오시타니 히토시(押谷仁) 교수와 일본 내 감염증 수리모델의 제1인자 니시우라 히로시(西浦博)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팀 및 국립감염증연구소 등의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¹¹⁾

즉 많은 사람에게 감염시킨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를 특정 하는 일이 감염 확대를 막는 하나의 열쇠가 된다고 인식되었다.

결과적으로 ‘복수의 사람들의 감염이 발생한 집단=클러스터를 발견하는 것’과 ‘클러스터를 되도록 만들지 않는 것’을 골자로 감염의 확대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클러스터대책이 되었다.¹²⁾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우선 ‘환경 측 요인’이 있다고 한다. 후생노동성 코로나 감염증 대책본부 안에 만들어진 클러스터 대책반에서는 ‘환경 측 요인’을 ‘3밀’이라고 명명했다.¹³⁾

즉, 클러스터화 된 환경을 조사해 보면, (1) 환기가 나쁜 ‘밀폐’ 공간일 경우, (2)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사람끼리 ‘밀접’한 환경인 경우, (3) 많은 사람이 모이는 ‘밀집’인 경우를 ‘3밀’이라고 하여 감염확대의 중요한 인자로 삼았다.

한편 ‘감염자 측의 요인’ 즉, ‘감염시키는 사람이 가지는 요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견이 생겼다.

예를 들면, ‘밀폐’ 공간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밀집’된 장소에서 사람과 사람이 큰 소리를 치면서 ‘밀접’하는 환경이 형성되었을 경우, 증상이 가볍거나 혹은 무증상이긴 하지만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클러스터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에 갈 기회가 많은 젊은 세대는 자신의 거주 지역을 넘어서 이동하는 경향도 있으므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도 클러스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¹⁴⁾

10) 출처: <https://www.at-s.com/news/article/health/national/737364.html> (검색일: 2020. 07. 02.).

11) 출처: <https://news.yahoo.co.jp/byline/yamamototakehito/20200502-00176314/> (검색일: 2020. 07. 02.).

12) 출처: <https://news.yahoo.co.jp/byline/yamamototakehito/20200502-00176314/> (검색일: 2020. 07. 02.).

13) 출처: <https://news.yahoo.co.jp/byline/yamamototakehito/20200502-00176314/> (검색일: 2020. 07. 02.).

14) 출처: <https://news.yahoo.co.jp/byline/yamamototakehito/20200502-00176314/> (검색일: 2020. 07. 02.).

한편, 접객을 수반하는 음식점(이른바 ‘밤의 거리 클러스터’)의 경우 우연히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은 중장년 손님이 ‘밀집’은 아니더라도 ‘밀접’한 대화를 나눈 종업원에게 감염시켜 이 종업원이 다른 손님에게 감염시키는 시나리오가 상정되었다. 이런 이론을 세워서 클러스터에 대처할 목적으로 클러스터 대책반이 설치되었다.

클러스터대책반은 지자체로부터 정보수집과 역학분석을 통해 감염전파의 실태를 파악하는 오시다니(押谷)교수반, 감염증 수리모델 전문가인 니시우라(西浦)교수반,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실태를 시각화하는 GIS(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반, 위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반, 후생노동성 행정관에 의한 운영반 등으로 구성되어 그들이 일본의 클러스터 대책을 주도했다.¹⁵⁾

2. PCR검사를 확대하지 않는 일본정부 방침

일본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의 유무를 조사하는 PCR검사가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실시된다는 것이 당초부터 지적받아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 요인으로서는 일본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 감염자 숫자를 적게 보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감염자가 되면 의료현장에서 대응할 수 없고 의료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PCR검사를 조기에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교도통신 2020/05/01)¹⁶⁾가 늘어나 논란이 확산되었다.

그런 가운데 PCR검사 건수를 고의적으로 적게 만들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는 문서의 존재가 보도되었다(주간 아사히 2020/04/13).¹⁷⁾

그 문서에는 <주치의 외래진단 절차(초진 예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의심되어 병원을 찾은 초진 환자가 병원 소개를 받아 코로나19 외래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절차가 차트로 표시되어 있다. 이 자료를 공개한 도쿄의 내과 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도쿄도의 의사사회로부터 도쿄도내의 개업 의사들에게 배부한 문서다. 차트는 PCR검사를 받게 하는 대상의 범위를 축소해 나가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주간 아사히 2020/04/13).”¹⁸⁾

15) 출처: <https://news.yahoo.co.jp/byline/yamamototakehito/20200502-00176314/> (검색일: 2020. 07. 02.).

16)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6f60e23a26c7345c5e7c2ff29a0705e293d5bfde> (검색일: 2020. 07. 02.).

17) 출처: AREAdot (검색일: 2020. 07. 02.).

18) 출처: AREAdot (검색일: 2020. 07. 02.).

4월 6일 PCR검사가 일본의 국민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었고 전국에 869개 있는 ‘귀국자·접촉자 외래’ 의사의 판단으로 보건소를 통하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 주치의 등은 여전히 보건소의 판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이 문서는 PCR검사 실시를 위한 판단기준으로 배포된 것이다.

차트만 봐도 길고 복잡한 경로를 따라가야 겨우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열 37·5도 이상’이나 ‘권태감’과 같은 조건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도 나와 있는 기준이지만 그 외에 ‘호흡곤란상태, 빈약한 호흡’, ‘청진에서 라임’등 폐렴 의심을 나타내는 징후가 있을 경우에도 아직 검사는 하지 않고 혈액검사나 흉부 X선 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절차 후 4일 이상 증세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비로소 코로나19 외래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말하자면 이 차트의 ‘골’이 PCR검사인데 그 ‘골’에 도달하는 것을 가로막는 ‘3조건’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37.5도↑〉/〈SpO2〈93%〉/〈폐렴상+〉

이 내용은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고 흉부 X선 검사에서 폐렴증상이 인정된다는 것. 이에 더해 SpO2가 93% 이하인 사람이 PCR검사를 받을 있다는 것이다. SpO2란 ‘동맥혈 산소 포화도’를 뜻하며 혈액 속의 산소가 적혈구와 결합되어 있는 비율을 나타낸다. 보통사람이면 98%정도의 산소포화도로 살고 있는데 93%는 씨근거리며 죽을 지경의 상태다.

결국 이 기준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까지 증상이 악화되지 않으면 PCR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때쯤은 이미 늦은 상태가 되어 있을 우려도 있다.

이렇게 엄격한 조건을 의료 종사자에게 제시하면서 일반국민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중 잣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주간 아사히 2020/04/13).¹⁹⁾

비슷한 기준은 도쿄도 외에서도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월 10일, 사이타마(埼玉)시 보건소의 소장이 PCR검사의 실시 기준을 엄격하게 하여서 검사 건수를 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사히신문 디지털 2020/04/13).²⁰⁾

3. 후생노동성, PCR검사 실시 기준을 수정

후생노동성은 2월17일 공표한 코로나19의 PCR검사를 위한 ‘상담·진료 기준’을 5월

19) 출처: AREAdot (검색일: 2020. 07. 02.).

20) 출처: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N4F43ZYN4FUTNB008.html> (검색일: 2020. 07. 05.).

6일 재검토했다. 기존에 기준은 원칙적으로 37.5도 이상의 발열이 4일 이상 계속되면 지정된 진료기관에 상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37.5도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삭제하고 답답함이나 심한 나른함 등이 있으면 바로 상담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통상 지자체 보건소 등에 설치된 ‘귀국자·접촉자 상담 센터’에 전화하여 증상을 신고한다. 그 후에 필요에 따라서 ‘귀국자·접촉자 외래’를 소개받아 PCR검사 등을 실시하는 구조다. 그런데 ‘37.5도 이상의 고열이 4일 이상’이라는 기준의 조건에 맞지 않아 중증화하거나 PCR검사가 늦어지는 실례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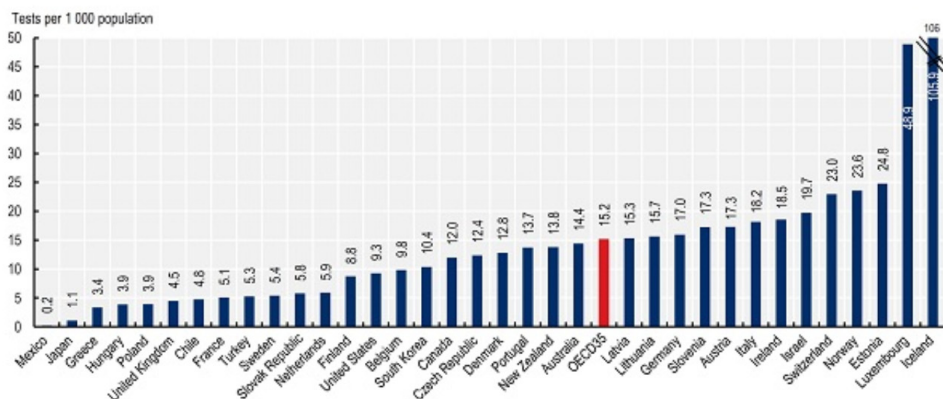
코로나19는 경증자나 무증상 감염자도 많은데 경증자로서 자택격리 하고 있던 환자의 상태가 급변해서 사망하는 케이스도 나왔다.

그러므로 일본정부는 상담·진료의 기준을 재검토하고 많은 환자를 폭넓게 검사와 치료에 연결하기로 했다(니혼케이자이신문 2020/05/06).²¹⁾

4. 일본의 PCR 검사건수와 일일 확진자수

일본의 PCR검사 건수가 적은 것은 계속 지적되어 온 문제점이다. 다음은 2020년 4월 15일까지 각국에서 실시된 PCR검사 총수의 비교 그래프이고 OECD가 공표한 내용이다. 인구 1000명당의 검사건수로 표시되어 있다(Science Portal China 2020/04/24).²²⁾

〈그림 1〉



Source: <https://ourworldindata.org/covid-testing>. Accessed 15 April 2020.

출처: Science Portal China(2020). https://spc.jst.go.jp/experiences/coverage/coverage_2012.html (검색일: 2020. 07. 05.).

21) 출처: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8793620W0A500C2CE0000/> (검색일: 2020. 07. 05.).

22) 출처: https://spc.jst.go.jp/experiences/coverage/coverage_2012.html (검색일: 2020. 07. 05.).

위 <그림 1>을 보면 OECD 가맹국 35개국의 평균은 인구 1,000명 당 15.2건의 PCR검사 실시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은 1,000명당 1.1명에 불과했다. 이 시기 한국에서는 1,000명당 10.4명 실시로 나타나 있어 단순 계산으로 한국이 일본의 9.5배정도 PCR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일본 내에서 일본의 PCR검사 건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그림 2>



출처: NHK특설사이트. <https://www3.nhk.or.jp/news/special/coronavirus/data-all/#pcr-inspection> (검색일: 2020. 07. 05.).

위 <그림 2>는 2020년 5월31일부터 6월 21일까지의 1일마다의 일본의 PCR검사 건수를 나타낸다. 후생 노동성은 6월 23일 현재, 5월 30일 이전의 1일마다의 검사 건수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그래프는 1일마다 검사건수가 공표된 5월 31일 이후를 표시했다.²³⁾

일본정부는 PCR검사 건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을 받아 검사 건수를 늘렸다. 그러나 이 표를 보면 검사건수가 가장 많은 날에도 9,000건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PDR검사 총수는 6월27일 현재 일본에서는 375,140건이다.²⁴⁾ 일본의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1일 현재 일본의 총인구는 1억2천593만명이다.²⁵⁾ 그러므로 6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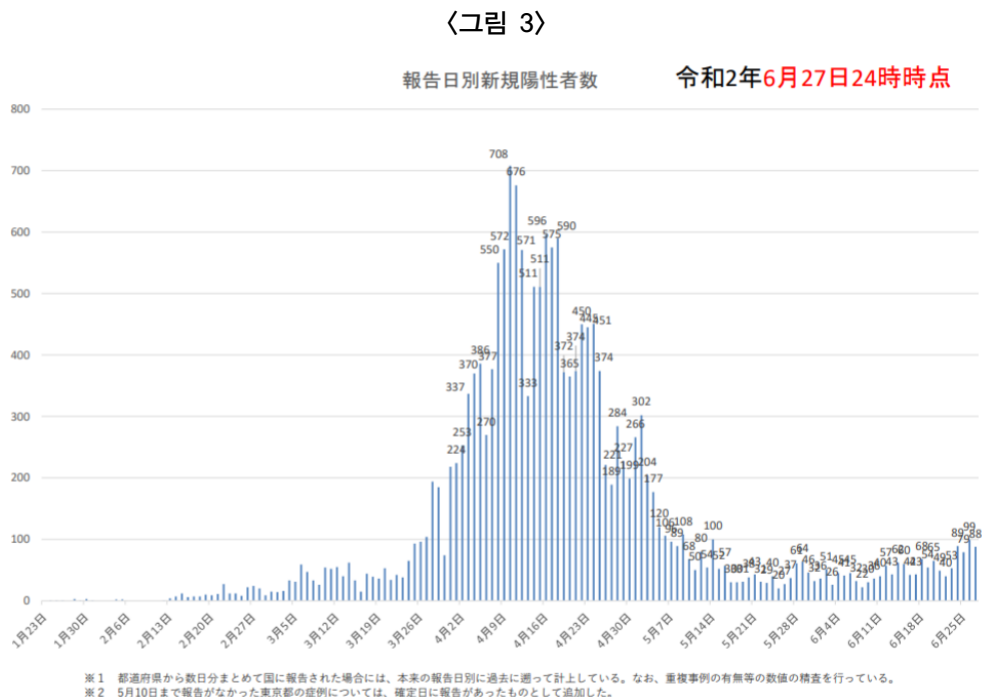
23) NHK특설사이트. 출처: <https://www3.nhk.or.jp/news/special/coronavirus/data-all/#pcr-inspection> (검색일: 2020. 07. 05.).

24) 마이니치신문 코로나 사이트. 출처: <https://mainichi.jp/covid19> (검색일: 2020. 07. 05.).

25) 일본 통계국 홈페이지. 출처: <http://www.stat.go.jp/data/jinsui/new.html> (검색일: 2020.

현재 일본의 인구 1,000명 당 PCR검사를 받은 사람은 약 2.98명이 된다. 이 숫자도 압도적으로 적은 숫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까지도 일본정부는 기본적으로 PCR검사 건수를 억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그림 3>은 1월 23일 이후 6월 27일까지의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수의 추이다.²⁶⁾



출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64708_00001.html (검색일: 2020. 07. 05.).

이 <그림 3>을 보면 검사 건수가 극단적으로 적은 일본에서도 3월 25일경부터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5월 7일경에 확진자 숫자가 100명 이하로 다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은 4월 7일 일본정부가 긴급사태를 선언한 영향으로 이해가 된다. 감염이 확대되기 시작한 3월말 이후의 일본정부 대책 발표를 보면 다음과 같았다.

07. 05.).

26)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출처: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6470800001.html> (검색일: 2020. 07. 05.).

1) 3월 23일 : 도쿄도의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지사는 세계적으로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향후 3주가 오버슈트(환자의 폭발적 급증)가 발생할지의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주장했다. 고이케 지사는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4월 12일까지 3주 동안 3밀 조건이 겹치는 장소를 피하도록 도쿄도민에게 요청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라이브 하우스, 클럽, 헬스장 등의 시설의 이용 자제, 행사 자제를 강력히 부탁했다.'²⁷⁾

2) 3월 24일 : 아베 총리와 바흐 IOC 회장이 전화 통화를 하고 도쿄 올림픽 · 패럴림픽을 1년 정도 연기해 늦어도 2021년 여름까지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도쿄 올림픽 개최의 당사자이기도 하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3월 23일의 상기 발언은 이미 일본정부의 올림픽 연기 결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고이케 지사의 정치적 파포먼스로서의 발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3) 4월 7일 : 아베 신조 총리는 4월 7일 코로나19 감염증 대책 본부에서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했다. 사이타마, 치바, 도쿄, 가나가와,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등 7개 도부현을 대상으로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 간 외출 자제를 강하게 요청했다.²⁸⁾

4) 4월 16일 : 코로나19 감염 확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4월 16일, 특별조치법에 근거하는 '긴급사태선언'을 전 도도부현으로 확대했다. 기간은 5월 6일까지였다. 홋카이도, 아이치현, 교토부 등은 도쿄도와 같은 정도로 만연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점적인 대처가 필요한 '특정 경계 도도부현'으로 지정했다.²⁹⁾

5) 5월 4일 : 아베 신조 총리는 5월 4일 코로나19 감염증에 관한 '긴급사태선언'을 5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실시 구역은 일본 전체였다. 다만, 5월 14일 시점에서 감염자수와 의료 제공 체제의 팽박 상황 등을 분석 · 평가해 가능하면 5월말을 기다리지 않고 '긴급사태'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3의 특정 경계 도도부현(도쿄도, 카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홋카이도, 이바라키현, 이시카와현, 기후현, 아이치현, 교토부)은 되도록 80%의 접촉 감소를 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27) nippon.com, 출처: <https://www.nippon.com/ja/news/thepage20200323002/> (검색일: 2020. 07. 07.).

28) 류추뉴스, 출처: <https://www.ryutsuu.biz/government/m040751.html> (검색일: 2020. 07. 07.).

29) 수상관저, 출처: https://www.kantei.go.jp/jp/98_abe/actions/202004/16corona.html (검색일: 2020. 07. 07.).

그 외의 현에 대해서는 ‘감염확대 방지’와 ‘사회경제활동 유지’의 양립을 고려한 활동으로 단계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³⁰⁾

6) 5월 25일 : 일본정부는 5월 25일,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수반한 ‘긴급사태선언’을 계속하고 있던 도쿄 등 수도권의 1도 3현과 홋카이도에서 5월 31일까지의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긴급사태’를 해제했다. 4월 7일부터 실시한 ‘긴급사태’가 약 7주만에 전면 해제되었다. 경제사회 활동의 재개는 감염 상황 등을 주시하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세계적으로도 매우 엄격한 수준의 해제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판단했고 벌칙을 수반하는 강제 외출 규제 등을 실시하지 않는 ‘일본만의 방식’으로 불과 한 달 반 만에 이번 유행을 거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³¹⁾

7) 6월 19일 : 일본정부는 ‘긴급사태선언’을 전면 해제한 5월 25일 경제활동 재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접대를 수반하는 음식점 등은 6월 19일에 재개할 방침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책의 책임자가 된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이 6월 13일 공표한 지침은 카바레, 호스트클럽, 스낵 등 접대를 수반하는 음식점과 나이트클럽과 라이브하우스 등 3개 업종을 해제대상에 포함했다. 3개 업종 모두에게 고객과 관계자들의 연락처 확인, 거리 두기 가능한 한 2미터, 최저 1미터를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니혼 케이자이신문 2020/06/14).³²⁾

이상과 같은 경위로 일본정부는 2020년 4월 7일 코로나19 감염증을 위한 대책으로서의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5월 25일 해제했다. 그후 경제활동이 서서히 재개되면서 일상생활이 조금씩 되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발령부터 약 1개월 반 동안 자숙생활을 해온 일본국민으로부터는 안도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한편, 도쿄도, 오사카부, 기타큐슈시 등은 그 후 감염자수가 다시 증가로 돌아선 도시도 있다. 즉, ‘제2파’가 도래한 것이었다.

30) GemMed. 출처: <https://gemmed.ghc-j.com/?p=33731> (검색일: 2020. 07. 07.).

31) Bloomberg 통신. 출처: <https://www.bloomberg.co.jp/news/articles/2020-05-24/QA00TNT1UM0Y01> (검색일: 2020. 07. 07.).

32) 출처: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0339810T10C20A6EA3000/> (검색일: 2020. 07. 07.).

5. 긴급사태선언 해제 후 다시 급증하는 확진자수

2020년 7월에 들어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하루에 수백 명 단위로 나오기 시작했고 코로나19 감염의 제2파가 이미 시작됐다는 우려가 확산되었다(News Week 일본판 2020/07/17).³³⁾

도쿄에서는 7월17일 293명의 신규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하루의 확진자 수로는 7월16일의 286명을 넘어 당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후 8월 8일 도쿄에서는 429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FNN프라임 온라인 2020/08/09).³⁴⁾ 과거최대였다. 8월 8일에는 전국에서 확진자는 1,568명이나 확인되었다. 그런데 일본정부 관계자들은 도쿄도에서는 PCR검사를 1일 4,000건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감염증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nippon.com 2020/07/17).³⁵⁾

일본 전국의 코로나9 확진자수는 7월 16일 625명을 기록했다. 하루의 확진자수로는 당시는 역대 3번째 수준으로 4월의 가장 많았던 수치(약 700명)에 육박할 기세였다. 도쿄 외에도 오사카, 가나가와, 사이타마, 치바 등 수도권에서는 긴급사태선언 해제 후 최다 감염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7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관광 수요 환기책 'Go To Travel 캠페인'에서 도쿄도를 제외했다(nippon.com 2020/07/17).³⁶⁾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생활 재개에 따라 장시간 전철로 출퇴근을 하는 등 시민들의 접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층이 변화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모이는 경향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조선일보 2020/07/14).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현재 일주일간의 도쿄도 확진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20대의 47%라고 분석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 2020/07/12).

일본정부가 뒤늦게 PCR 검사 수를 늘리고 있는 것도 확진자수 증가의 배경 중 하나다. 그러나 확진자수의 증가의 요인으로 PCR검사수의 증가를 거론한다면 일본에는 숨은 확진자가 아직 상당수 존재한다고 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동안 일본정부는 고의적으로 PCR검사수를 억제해 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래 <그림 4>는 3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도쿄도에서 감염이 확인된 인원수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Bloomberg 통신 2020/08/07).³⁷⁾

33) 출처: <https://www.newsweekjapan.jp/stories/world/2020/07/300-13.php> (검색일: 2020. 07.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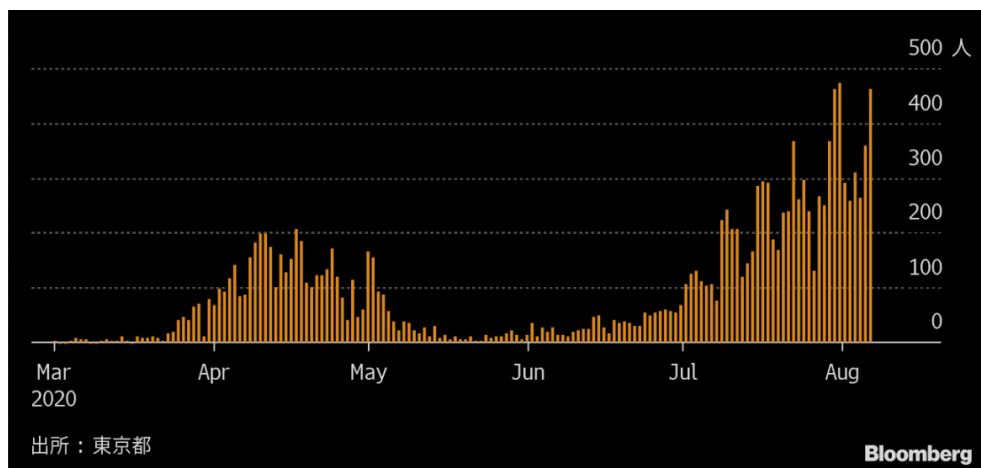
34)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7785c11b7733f9d01646eca241353caa78385ccc> (검색일: 2020. 08. 11.).

35) 출처: <https://www.nippon.com/ja/japan-data/h00663/> (검색일: 2020. 07. 20.).

36) 출처: <https://www.nippon.com/ja/japan-data/h00663/> (검색일: 2020. 07. 20.).

37) 출처: <https://www.bloomberg.co.jp/news/articles/2020-08-07/QEO167DWRGG001> (검색일: 2020. 08. 11.).

〈그림 4〉



출처: Bloomberg 통신(2020), <https://www.bloomberg.co.jp/news/articles/2020-08-07/QEO167DWRGG001> (검색일: 2020. 08. 11.).

일본의 야당들은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긴급사태를 다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베정권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조선일보 2020/07/14).

스가 관방장관은 7월 11일, 긴급사태를 다시 선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것은 검사 수를 대폭 확충한 결과라는 인식을 나타냈고 “지금은 30% 남짓밖에 침대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병상에 여유가 있어 긴급사태를 선포한 4월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경제 활동의 단계를 조금씩 높여가겠다는 일본정부의 방침에 이해를 구했다(AMEMA TIMES 2020/07/11).³⁸⁾

일본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은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PCR검사수를 늘리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PCR검사수를 늘리는 방법은 한국식 방법과 비슷하다. 즉 7월 17일 현재 일본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은 종래의 클러스터 정책으로부터 PCR검사수 확대로 일본 국내의 전체적인 감염상황을 파악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말하자면 숨어 있는 게릴라성 바이러스를 찾아내 치료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전환되었다. 그런데 일본정부의 이런 방침과 전문가회의 사람들 사이에 의견의 대립이 생겼다. 전문가들은 필요 없이 검사를 늘리면 의료붕괴가 일어난다는 관점에서 검사 확대에 반대했다.

38)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ab6d1aa85e0a640d3c60538102784bf743a18c8f> (검색일: 2020. 07. 20.).

6. 일본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이 세계표준이 아닌 이유

도쿄도에서 코로나19 감염 확대가 계속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회활동을 재개하면 확진자의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각국은 대책에 여념이 없다. 코로나19 대책의 중심은 검사 체제의 확충이다(幻冬社ON LINE 2020/07/11).³⁹⁾ 코로나19에 한정하지 않고 감염증 대책의 기본은 조기 진단 · 치료 · 격리(자가격리 포함)이다. 코로나19의 경우 PCR검사를 하지 않으면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幻冬社ON LINE 2020/07/11).⁴⁰⁾

코로나19 유행이 재연된 베이징 시는 시내 식품도매시장에서 감염자가 확인된 6월 11일 이후 검사 규모를 확대해 하루 30만 개가 넘는 샘플을 처리하고 있다(로이터통신 2020/06/24).⁴¹⁾ 6월 28일 정오 현재 베이징시는 829만 9,000명의 검체를 채취했고 768만 7,000명의 검사를 종료했다고 발표했다(幻冬社ON LINE 2020/07/11).⁴²⁾

베이징 시의 인구는 약 2,000만 명이기 때문에 약 40%가 검사를 받은 셈이다.

감염 확대가 계속되는 미국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베이징과 같다. 미국에서는 2020년 7월 2일 현재 하루에 약 50만건의 PCR검사를 실시 중이다(MIT technologyreview 2020/07/02).⁴³⁾ 4월 하순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에 500만 건의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사실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적은 숫자이지만 일본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검사를 하루에 실시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뉴욕 주는 7월 1일 현재 모든 뉴욕 주민은 주내에 존재하는 750개 정도의 검사센터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HUFFPOST 2020/07/13).⁴⁴⁾ 뉴욕주의 인구는 약 1,950만명이므로 인구 2.6만명당 PCR 검사센터가 하나 존재하는 셈이다.

그런데 일본의 상황은 다르다. 검사 능력은 최대 하루 2만8,000건이다(시사통신 2020/06/24).⁴⁵⁾ 자민당 내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책 본부의 타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39)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bfb67fe966fa5be113b98687024626a63e6005ad?page> (검색일: 2020. 07. 20.).

40)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bfb67fe966fa5be113b98687024626a63e6005ad?page> (검색일: 2020. 07. 20.).

41)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0cc1dc01dc4b71fe2542db6989f78821196584d8> (검색일: 2020. 07. 20.).

42)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bfb67fe966fa5be113b98687024626a63e6005ad?page> (검색일: 2020. 07. 20.).

43) 출처: <https://www.technologyreview.jp/s/210745/the-us-now-has-more-covid-19-tests- than-it-knows-what-to-do-with/> (검색일: 2020. 07. 20.).

44)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7b168c6a645a7b5cf814f48e167d9c15c3335884> (검색일: 2020. 07. 20.).

본부장(전 후생 노동상)은, PCR 검사나 항원 검사에 대해서 “하루 10만 건의 검사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수치 목표 안을 제시했다(幻冬社ON LINE 2020/07/11).⁴⁵⁾

그런데 이런 보도는 일본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2020년 7월 18일이 되어야 비로소 일본에서는 하루 약 20만건의 PCR검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회의 관계자의 코멘트가 나왔다(동양경제 ON LINE 2020/07/18).⁴⁶⁾

그러나 일본정부의 전문가회의 관계자들은 PCR검사 확대에는 반대해 왔다. 주간지 「선데이 매일」 7월 12일호에 게재된 오카베 노부히코(岡部信彦) 가와사키(川崎)시 건강 안전연구소 소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오카베는 “제2파에서 PCR 검사신앙이 사라진다”라고 검사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코멘트를 냈다.

오카베는 2013년까지 국립감염증연구소 감염증 정보센터장을 맡은 인물이며 같은 해 가와사키시 건강안전연구소 소장에 취임했다. 그는 일본정부의 코로나19 대책 전문가회의 위원이기도 하다.

국립감염증연구소는 후생노동성의 내부 조직으로 감염증정보센터는 보건소와 함께 감염증법에 규정된 후생노동성의 감염증 대책의 핵심조직이다(幻冬社ON LINE 2020/07/11).⁴⁸⁾ 즉, 일본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의 중심인물이 PCR검사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PCR검사 확대에 반대하는 사람은 후생노동성 관계자 중에서는 오카베만이 아니다. 같은 전문가회의 위원을 맡은 오시타니 히토시(押谷仁) 도호쿠대학 대학원 교수도 2020년 3월 22일에 방송된 NHK스페셜 “팬데믹과의 싸움-감염확대는 억제할 수 있을까-”에 출연해 “(코로나19는) 모든 감염자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클러스터만 발견하면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 “PCR검사를 억제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일본이 이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언급했다(幻冬社ON LINE 2020/07/11).⁴⁹⁾

후생노동성 의료계 기술관의 수장 스즈키 야스히로(鈴木康裕)는 월간 「집중」 6월호의 인터뷰에서 “확진자들의 절반이 의심양성자라면 병상을 정말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병상을 차지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여 PCR검사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PCR검사를 강력히 권장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幻冬社ON LINE 2020/07/11).⁵⁰⁾ 이런 발언은

45) 출처: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062400981&g=int> (검색일: 2020. 07. 20.).

46)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bfb67fe966fa5be113b98687024626a63e6005ad?page> (검색일: 2020. 07. 20.).

47) 출처: <https://toyokeizai.net/articles/-/363744> (검색일: 2020. 07. 25.).

48)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bfb67fe966fa5be113b98687024626a63e6005ad?page> (검색일: 2020. 07. 20.).

49)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bfb67fe966fa5be113b98687024626a63e6005ad?page> (검색일: 2020. 07. 20.).

일본이 의료붕괴를 우려해서 PCR검사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의혹을 인정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PCR 검사 수용 능력은 통계로 일주일에 110만건(NHK 뉴스 2020/07/09),⁵¹⁾ 즉 하루에 약 16만 건을 실시하고 있다. 3월 초순에는 하루 1만 건 이하였지만 이후 큰 폭으로 검사를 증가한 것이다(幻冬社ON LINE 2020/07/11).⁵²⁾ 그러나 일본은 거의 검사수를 늘리지 않았다.

아베총리는 거듭 PCR검사를 늘리라고 말해 왔다(시사통신 2020/05/15).⁵³⁾ 그렇지만 후생노동성은 검사가능체제를 확보했다는 말만 했고 관계전문가들은 태연하게 총리의 의향을 무시해 왔다.

PCR검사의 문제는 국가통치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크다. 총리의 지시를 듣지 않는 테크노크라트 집단이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PCR검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증자나 감염 초기의 환자는 양성인데도 음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감염자를 찾아내 치료·격리하려면 PCR검사를 증가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사회·경제적 활동을 계속하지 않으면 사회나 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 많은 나라들은 PCR검사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검사수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지향하고 있다. 7월까지 일본은 이런 원리원칙에서 벗어나 있었다.

7. 일본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의 전환

2020년 7월 이전의 일본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은 상기한 바와 같이 봉쇄대책과 클러스터 대책, 그리고 ‘긴급사태 선언’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요약된다. 봉쇄대책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방어’로 본다면 클러스터대책은 ‘공격’인 셈이다. 그러나 클러스터대책에는 감염을 전파하는 전파력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전제를 두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PCR검사 건수를 늘리지 않는 오류를 범했다. 그리고 특히 전문가회의는 PCR검사를 늘리면 의료붕괴가 온다는 구실을 내세웠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누가 감염자인지 알 수 없는 환경이 일본에서는 극복하지 못한

50)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bfb67fe966fa5be113b98687024626a63e6005ad?page> (검색일: 2020. 07. 20.).

51) 출처: <https://www3.nhk.or.jp/news/html/20200709/k10012505371000.html>.

52)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bfb67fe966fa5be113b98687024626a63e6005ad?page> (검색일: 2020. 07. 20.).

53) 출처: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051501248&g=soc> (검색일: 2020. 07. 25.).

약점으로 남았고 긴급사태선언 해제 이후 코로나 제2파를 맞이했다. 일본은 2020년 7월까지 일본 국내의 코로나19 감염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2020년 7월 들어 다시 감염이 급증하자 일본정부는 PCR검사 확대라는 코로나19 대책전환을 시도했다. 그렇지만 검사확대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검사건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

IV. 코로나19 대책의 전문가회의의 발족과 폐지

1. 전문가회의의 발족과 폐지 경위

2020년 2월 14일 일본정부는 1월에 설치한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본부장 : 아베신조 총리) 하에 코로나19 감염증 대책에 의학적 견지에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전문가회의(이하, 전문가회의)’를 발족했다.

그런데 전문가회의가 중앙정부보다 마치 지휘권을 잡는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주기 시작했다. 전문가회의의 구성원은 좌장과 부좌장, 그리고 구성원10명 등 12명으로 정해졌다.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여 전문가회의는 일본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의 방향을 주도했다.

전문가회의는 코로나19 대책에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는 일본정부를 대신해 국민들 앞에 많은 제언을 내놓았다. 전문가회의는 ‘사람과 사람의 접촉 80% 감소’, ‘새로운 생활양식 확립방안’ 등,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차례차례로 발표했다. 일본정부는 전문가회의의 제언을 토대로 국민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책, 예를 들어 2월말의 휴교·휴업요청이나 3월초의 중국·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등을 실행에 옮겼다.

전문가회의가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발신을 강화한 것은 3번째 전문가회의가 있던 2월 24일이었다. 그때 전문가회의의 멤버가 독자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부터 1~2주가 급속한 감염 확대가 진행될지 수습할 수 있을지의 고비”라는 견해를 공표해 강하게 코로나19 확대를 경고했다(아사히신문 2020/02/24).⁵⁴⁾ 마치 일본정부를 무시한 이런 전문가회의의 행보는 ‘너무 나간다’고 비판받았다(의료유신 2020/06/29).⁵⁵⁾

그런 ‘너무 나가는’ 전문가회의의 행보가 그 후에도 많아진 배경에는 전문가회의의 멤버들이 일본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위기감을 가졌기 때문이다(니혼케이자이신문 2020/06/24

54) 출처: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N2S62T0N2SULBJ00D.html> (검색일: 2020. 07. 25.).

55) 출처: <https://www.m3.com/open/iryoIshin/article/791601/> (검색일: 2020. 07. 25.).

).⁵⁶⁾ 일본정부는 2월초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대응에 바빴다. 그러면서 시중에는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사실을 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신형 인플루엔자보다 환자가 중증화 하고 사망할 리스크가 높고 대면으로 접촉하면 감염되기 쉬운 것을 알아가고 있었다. 이대로 방치하면 감염이 시중에 폭발적으로 퍼질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멤버들 사이에 공유되었고 독자적으로 발신해 나갈 방향이 설정되었다(니혼케이자이신문 2020/06/24).⁵⁷⁾ 그러나 이런 상황이 조금씩 총리와 내각관방, 그리고 일본정부 관련 부처들과의 마찰로 나타나기 시작한 요소가 되었다. 즉 ‘하극상’이 일어난 셈이다.

전문가회의는, 젊은 세대를 향해서 ‘사람이 모이는, 통풍이 안 좋은 장소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중증화를 막아서 생명을 구할 수 있다’(3월 2일), ‘폭발적인 환자 증가(오버슈트)가 일어나기 전에 의료현장이 기능부전에 빠질 수 있다’(4월 1일) 등의 강한 메시지를 계속 국민들에 발신했다(아사히신문 2020/06/11).⁵⁸⁾

전문가회의의 오미 시게루(尾身茂) 부좌장은, 이런 독자적 메시지 발신이 전문가회의의 역할로는 일탈행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신형 인플루엔자나 SARS와 전혀 다른 무서운 측면이 있는 미지의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를 어떻게 줄일까하는 생각으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빨리 국민들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고 전해진다(아사히신문 2020/06/11).⁵⁹⁾

전문가회의의 멤버는, 보다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유지의 모임’을 만들었고⁶⁰⁾ 4월 이후, 웹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발신하게 되었다. 전문가회의에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 니시우라 히로시(西浦博) 홋카이도대학 교수 등이 참여했다.

니시우라교수는 아무것도 행동 제한을 취하지 않으면 유행 수습까지 일본국내에서 42만명이 감염에 의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4월15일 공표했다(아사히신문 2020/04/15).⁶¹⁾ 이때 니시우라교수의 발표가 개인의 견해인지, 전문가회의의 견해인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코로나19 대책에 고생한 일본정부는 3월 성립시킨 ‘개정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

56) 출처: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0747630U0A620C2CR8000/> (검색일: 2020. 07. 25.).

57) 출처: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0747630U0A620C2CR8000/> (검색일: 2020. 07. 25.).

58) 출처: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N6B7QBQN69ULZU004.html> (검색일: 2020. 07. 25.).

59) 출처: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N6B7QBQN69ULZU004.html> (검색일: 2020. 07. 25.).

60) 출처: <https://note.jp/n/n778557ca1667> (검색일: 2020. 07. 25.).

61) 출처: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N4H3J87N4HULBJ003.html> (검색일: 2020. 07. 25.).

법'을 근거로 '긴급사태선언' 발령이나 해제 판단에 의견을 듣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정부가 소집하기도 했다. 한때는 전문가회의와 자문위원회가 같은 날에 열렸고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에 오미 시게루가 배석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코로나19 대책에 관한 행동 방침이나 외출 자제 등을 국민에게 호소했다.

그런데 전문가회의에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것이 5월말에 발각되어 무엇이 논의되었는지 검증할 수 없는 것이 문제시되었다(아사히신문 2020/05/29).⁶²⁾

그리고 일각에서는 '전문가회의가 발신한 80% 삭감이나 3밀 대책을 호소하는 것은 본래 정치가들의 역할인데 전문가회의가 리스크 관리를 언급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어났고 '전문가가 전면에 나서서 오히려 경제가 타격을 받았다'는 비판도 분출하기 시작했다(아사히신문 2020/06/11).⁶³⁾ 그리고 많은 일본국민들이 아베총리와 후생노동성, 그리고 전문가회의 사이에 마찰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20년 6월24일 전문가회의는 갑자기 일본정부의 코로나대책 담당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담당상의 발표로 폐지되었다.

니시무라 담당상은 전문가회의를 폐지한 다음 멤버를 확충하는 등 하여 일본정부 내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분과회'를 새롭게 설치할 생각을 피력했다. 일본정부와 전문가회의의 균열이 표면화된 셈이다(지지통신 2020/06/27).⁶⁴⁾

니시무라 담당상의 발표와 같은 시각인 6월24일 저녁,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던 오미 시게루 부총장은 니시무라 담당상의 전문가회의 폐지 발표를 전달받아 당황했다(지지통신 2020/06/27).⁶⁵⁾

국민의 눈에는 전문가회의가 일본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결정하는 것처럼 비쳐져서 전문가회의 회원들은 비판의 화살을 맞기도 했다. 5월 4일 아베 총리의 회견에 참석한 오미 시게루 부총장이 PCR 검사가 적은 이유에 대해 기자들에 설명하느라 바빴다(지지통신 2020/06/27).⁶⁶⁾

전문가회의와 일본정부 간의 의견 차이는 5월 1일의 전문가회의 제언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처에도 나타났다. 제언에서는 '긴급사태 선언의 장기화도 염두에 두고 향후 1년 이상 지속적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원안에 있었으나 발표 직전에 삭제되었다(지지통신 2020/06/27).⁶⁷⁾

62) 출처: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N5Y6DCGN5YUTFK00P.html> (검색일: 2020. 07. 25.).

63) 출처: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N6B7QBQN69ULZU004.html> (검색일: 2020. 07. 25.).

64) 출처: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062700143&g=pol> (검색일: 2020. 07. 25.).

65) 출처: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062700143&g=pol> (검색일: 2020. 07. 25.).

66) 출처: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062700143&g=pol> (검색일: 2020. 07. 25.).

67) 출처: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062700143&g=pol> (검색일: 2020. 07. 25.).

결국 전문가회의와 일본정부 간의 균열을 표면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되었고 ‘전문가회의’ 폐지, 법적인 지위를 가진 코로나19 대책 분과회로의 변환, 지자체 대표들의 분과회 참가가 정해졌다(지지통신 2020/06/27).⁶⁸⁾

2. 전문가회의는 실패였다

코로나19 대책에 관한 일본정부와 여야의 연락 협의회가 6월26일 개최되었다. 일본정부가 전문가회의를 폐지해, 새로운 분과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일에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 측도 반발했다. 연립여당 공명당의 다카기 미치요(高木美智代) 정조회장대리는 기자단에 대해 “여당에게 사전 설명이 없었다. 여당의 양해 하에서 정책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니혼케이자이신문 2020/06/26).⁶⁹⁾

다카기씨는 기자단에게 “전문가회의의 설치에 공명당이 정부에 제언해 실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리 옆에 전문가가 있으면서 발신을 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소통은 성립되지 않는다. 개편한다면 그 목적이나 그동안의 전문가회의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니혼케이자이신문 2020/06/26).⁷⁰⁾

입헌민주당의 오사카 세이지(逢坂誠二) 정조회장은 “어떤 경위로 정해졌는지, 새로운 체제로 이동하는 것의 합리성이 있는지”라고 하면서 일본정부에 설명을 요구했다(아사히신문 디지털판 2020/06/26).⁷¹⁾

전문가회의에 대한 일련의 사태는 결국 아베총리의 지도력 부족으로 귀결되었다. 전문가회의는 명목상 일본정부의 코로나19 대책본부 산하에 있었지만 사실상 독립조직이었다. 그들의 수장은 아베총리였지만 아베총리의 코로나19에 대한 몰이해와 낮은 관심도 때문에 전문가회의는 독자적 행보를 시작해 그것이 결국 아베총리로서도 ‘하극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가토 노부카쓰(加藤信勝) 후생노동성 장관이 대책본부의 실무를 맡고 있었고 그는 후생노동성과 관련이 많은 전문가회의의 위원들을 단속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가토 장관은 코로나19에 대한 소극적 대처와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부족으로 코로나19 담당 장관이 변경되었다.

68) 출처: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062700143&g=pol> (검색일: 2020. 07. 25.).

69) 출처: <https://r.nikkei.com/article/DGXMZO60852890W0A620C2EA3000?s=3> (검색일: 2020. 07. 25.).

70) 출처: <https://r.nikkei.com/article/DGXMZO60852890W0A620C2EA3000?s=3> (검색일: 2020. 07. 25.).

71)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02c74b18e3ad01abd3c9e5d0cf57de3915179d4a> (검색일: 2020. 07. 25.).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담당상이 가토 후생노동성 장관을 대신하여 코로나 대책장관을 2020년 3월6일부터 겸임하게 되었다. 아베총리가 현장 지휘관을 교체한 셈이다.

V. 일본의 코로나9 대책과 포스트 아베

1. 아소 부총리의 ‘민도’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른 일본

망언 제조기로 불리는 아소 타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의 2020년 6월 4일 참의원 재정 금융위원회에서 다시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그는 일본은 다른 나라와 ‘민도가 달라’ 코로나19 대책에 성공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FLASH 2020/06/04).⁷²⁾

아소 부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일본국민들이 외출 자제나 휴업 등에 잘 협력했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강제력이나 벌칙이 없는 ‘요청’임에도 잘 협력해 줘서 감염 확대 억제에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마이니치신문 2020/06/04)⁷³⁾고 했는데 이 발언에 비판이 쇄도했다. 다른 나라의 국민들을 폄하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었다. 그뿐이 아니라 아소 부총리의 발언에는 사실이 아닌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소 타로는 “코로나는 사망률이 가장 문제”라고 하면서 “조사에 의하면 인구 100만명당 사망자를 볼 때 일본은 7명, 프랑스는 228명(실제로는 433명), 미국이 824명(실제로는 326명), 영국은 309명(실제로는 596명)”이라고 언급했다(마이니치신문 2020/06/04).⁷⁴⁾

아소 부총리는 이어서 해외에서 가끔 전화가 와서 “일본은 무엇인가 약을 갖고 있는 거지?”라고 질문을 받는다고 했다. 그럴 때 그는 “당신의 나라와 일본은 국민의 ‘민도’ 수준이 다르다”라고 말해 왔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그렇게 답하면 상대가 더 이상 질문을 해오지 않게 되니 항상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고 자랑했다.

그는 또 “일본이 섬나라여서 연대가 강했고 일본국민이 정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 왔다”고도 했다. “일본은 선진국(=G7) 가운데 사망률이 가장 낮고 사망자의 절대 수도 적다. 해외로부터 보면 악한 부탁 수준인데 이만큼 효과를 본 것은 우리로서는 자랑스러워야

72)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5e1842b40a7eb21485e308e6f85c27428c898125> (검색일: 2020. 07. 25.).

73) 출처: <https://mainichi.jp/articles/20200604/k00/00m/010/317000c> (검색일: 2020. 07. 25.).

74) 출처: <https://mainichi.jp/articles/20200604/k00/00m/010/317000c> (검색일: 2020. 07. 25.).

할 것”이라고 하여 끝을 맺었다.

그런데 ‘민도’라는 말은 현재 일본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말이다. ‘민도’라는 말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조선이나 대만에 대해 “민도가 낮다”는 식으로 사용한 말이다. 특히 조선에 보통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오랫동안 주저한 일본정부는 조선에 대한 보통선거제 도입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선은 아직 민도가 낮다”는 말을 사용하여 반대했다(호사카 유지 2002, 85).

당시 ‘민도’라는 말은 조선과 일본을 법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고 싶지 않은 일본정부의 구실에 불과했다. 일본에서는 역사상 악의적으로 사용된 ‘민도’라는 말을 이번에 아소 타로는 “협력할 수 있는 국민”이라는 맥락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100만명 당 사망률은 일본이 7.2명이고 이 숫치는 G7 국가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낮은 수치다. 이탈리아는 약 557명, 캐나다가 약 200명, 독일은 약 103명이니까 일본의 사망률은 굉장히 낮다(마이니치신문 2020/06/04).⁷⁵⁾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 비교하면 일본은 필리핀 9.0 명보다는 적지만 인도네시아 6.3명, 한국 5.3명, 인도 4.4명, 호주 4.0명, 중국 3.2명 보다는 사망률이 높다(마이니치신문 2020/06/04).⁷⁶⁾ 그렇다면 이런 아시아의 나라들이 일본보다 ‘민도’가 높다는 이야기가 된다. 아시아의 나라들을 무시하면서 아소 타로 부총리가 일본이 ‘민도’ 운운하는 것은 큰 문제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일본이 서양보다 코로나19 사망률이 낮은 이유

아시아 각국이 서양 여러 나라와 비교할 때 사망률이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서는 일본에서 나온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하마마츠(浜松) 의료센터 원장보좌 야노 쿠니오(矢野邦夫)는, “일본의 경우, 마스크 착용습관이 큰 요인이라 본다”라고 말한다. 그는 “마스크는 예방에 효과는 없지만 남에게 감염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은 키스나 허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이 퍼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데일리신초 2020/06/05).⁷⁷⁾ 일본에서는 평소 손 씻기와 양치질을 잘 한다는 습관도 주효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도쿄 치과대학 이치카와(市川) 종합병원 호흡기 내과의 데라시마 타케시(寺嶋毅) 교수는 비만이라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75) 출처: <https://mainichi.jp/articles/20200604/k00/00m/010/317000c> (검색일: 2020. 07. 25.).

76) 출처: <https://mainichi.jp/articles/20200604/k00/00m/010/317000c> (검색일: 2020. 07. 25.).

77)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36987ed25b347be56c4f9cc9146aa8b0f575b889?page=2> (검색일: 2020. 07. 25.).

“비만이 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중증화 위험이 높다.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BMI⁷⁸⁾ 40 이상인 사람의 사망률은 표준체형의 227배라는 연구 데이터가 나와 있다. 뉴욕대 조사에서도 BMI가 30 미만인 환자에 비해 BMI 30~40으로 입원율은 4배, BMI 40 이상이 되면 6배가 된다. 비만은 유전자와 식생활이 크게 관련되어 있는데 일본인은 서양인보다 비만이 되기 어렵다(데일리신초 2020/06/05).”⁷⁹⁾

그 외에도 BCG 백신 접종 여부가 중증화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BCG 백신을 맞는 나라에서는 사망자수가 적은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데일리신초 2020/06/05).⁸⁰⁾

그리고 미국의 전국보건통계센터가 인종별 사망률을 공표했다. 의료 저널리스트에 의하면, “미국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지역에서 아시아계 주민의 비율은 전인종의 11·5%이다. 반면 아시아계 주민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률은 전인종의 5·8%다. 아시아계라고 해도 미국에 살고 있어서 생활양식은 모국과 다를 텐데 아시아계의 사망률은 낮게 나타났다(데일리신초 2020/06/05).”⁸¹⁾

이런 결과는 인종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낮은 사망률을 유전자 해석으로 규명하기 위해 연구팀이 편성되었다. 교토대, 케이오대, 오사카대 등 8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프로젝트로 의료기관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환자 총 600명의 혈액을 채취해 게놈(전 유전정보)을 분석한다는 프로젝트다.

케이오대학 의학부의 카나이 타카노리(金井隆典) 교수는 “일본의 사망자수가 약 800명(2020년 5월말 현재)이라는 것은 어떠한 유전학적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다(데일리신초 2020/06/05).⁸²⁾

카나이 타카노리 교수는 다음과 같이 계속했다.

“인종 간 차이가 많이 난다는 HLA(인간 백혈구항원)라는 게 있다. HLA는 쉽게 말해

78) BMI : 비만이나 저체중의 판정을 위해 사용된다. 비만도를 표시하는 지표로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체격지수이고 [체중(kg)]÷[身長(m)]의 거듭제곱으로 계산한다. WHO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는 30이상이 “Obese” (비만) 이다.

79)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36987ed25b347be56c4f9cc9146aa8b0f575b889?page=2> (검색일: 2020. 07. 25.).

80)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36987ed25b347be56c4f9cc9146aa8b0f575b889?page=2> (검색일: 2020. 07. 25.).

81)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36987ed25b347be56c4f9cc9146aa8b0f575b889?page=2> (검색일: 2020. 07. 25.).

82)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36987ed25b347be56c4f9cc9146aa8b0f575b889?page=2> (검색일: 2020. 07. 25.).

백혈구의 혈액형이다. 다만 일반적인 A, B, O라는 혈액형보다 훨씬 복잡하게 분류되어 있다. HLA를 백혈구를 위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몸속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단편이 HLA라는 그릇에 올려 지면 그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백혈구가 공격한다. 단, 같은 바이러스라도 그 그릇의 형태가 다르면 백혈구의 기능에 차이가 생긴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인종에 따라 중증화 리스크에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 차이는 면역 기능의 차이이며 HLA의 차이가 아닐까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기타, 필자의 의견으로는 일본은 생활에서 이미 거리 두기를 잘해 왔다. 일본인들은 보통 남들과 1m 이내에 접근하지 않는다. 일본엔 교회가 별로 없고 대규모 집회도 거의 하지 않는다. 밥도 혼자 잘 먹는다. 일본에서는 애인들도 손을 잡고 다니지 않는다, 등등.

필자는 이런 일본인들의 습관이 일본의 사망률을 낮게 만든 요인이라 생각한다.

한편 일본인보다 훨씬 사람들과의 접촉을 좋아하는 한국이 K-방역으로 세계의 모범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사망률이 서양보다 낮다는 것뿐이지 그것으로 아베정권의 코로나19 대책을 평가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

3. 포스트 아베에 영향력을 발휘한 아베총리의 코로나 보상금 방침 전환

아베정권은 2020년 4월 7일 긴급사태선언을 발동하여 우선 도쿄도 등 7개 지방을 대상으로 했다. 그 후 4월 16일에는 긴급사태선언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했고 완전 해제는 5월 25일이었다. 긴급사태선언의 중심적 목표는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었고 특히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바이러스 감염 확대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80% 이상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아베정권이 주장했다. 그 때문에 4월 7일 음식점 등의 영업 자제를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수입이 줄어드는 세대나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의 경제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NewsSocra 2020/04/27).⁸³⁾

그러나 그 후 7일 정도로 아베정권은 1세대 당 30만엔 지급방침을 1인당 10만엔을 지급하는 방침으로 갑자기 전환했다. 결국 이 방침 전환이 포스트 아베 레이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코로나19 문제가 다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좌지우지한 결과가 되었다.

원래는 소득이 감소한 세대에 1세대 당 30만엔을 지급한다는 것이 아베정권의 방침이었다. 아베정권은 4월 7일 긴급사태를 선포하면서 사업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0%에

83)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88af7833d86da89730d6108a61138b502b5a396c> (검색일: 2020. 07. 25.).

달하는 108조엔라는 긴급경제대책을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긴급경제대책은 규모만 크게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1세대당 ‘30만엔’ 지급이라는 내용이 논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지급을 받으려면 월 소득의 감소가 조건인데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0% 정도밖에 없었다. 게다가 1세대는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2인~5인 가구도 있을 텐데 똑같이 30만엔을 지급한다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NewsSocra 2020/04/27).⁸⁴⁾

한편,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하는 공명당은 처음부터 국민 1인당 10만엔 지급을 주장했고 자민당 내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있었다.

이런 상황은 2020년 4월 14일 바뀌었다. 자민당의 니카이 토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일률 10만엔 현금 급부를 요구하는 절실한 목소리가 있다”라고 기자단에게 말했고 이것으로 흐름이 바뀌어 버렸다(NewsSocra 2020/04/27).⁸⁵⁾

공명당의 모체 지지 단체인 ‘창가학회’의 강한 요청도 있어 4월15일 오전 야마구치 나츠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가 아베총리에 직접 1인당 10만엔 지급을 요청했다. 이때 야마구치 대표는 아베 총리에 연정 이탈도 불사할 태세로 30만엔을 철회하고 추경예산안을 재편성하라고 압박했다. 아베 총리도 최종적으로 1인당 10만엔 지급 안을 받아들였다(NewsSocra 2020/04/27).⁸⁶⁾

이에 따라 1세대 30만엔 급부를 주도한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의 체면이 꾸겨졌다. 기시다 후미오는 아베총리가 가장 선호하는 포스트 아베 후보이지만 이 사건으로 구심력 저하는 불가피해졌다(지지통신 2020/04/18).⁸⁷⁾

4. 아베내각의 지지율이 하락과 2020년 가을 중의원 해산설

아베정권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비판받고 있다. 그 결과는 아베내각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다.

지지통신이 7월10일~13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아베내각 지지율은 35.1%, ‘지지하지 않는다’는 46.2%였다. 지지하지 않는다가 지지를 역전한 것은 3개월 연속이다(지

84)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88af7833d86da89730d6108a61138b502b5a396c> (검색일: 2020. 07. 25.).

85)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88af7833d86da89730d6108a61138b502b5a396c> (검색일: 2020. 07. 25.).

86)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88af7833d86da89730d6108a61138b502b5a396c> (검색일: 2020. 07. 25.).

87) 출처: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041701124&g=pol> (검색일: 2020. 07. 25.).

지통신 2020/07/17).⁸⁸⁾ 코로나19 감염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가 46.0%로 ‘평가한다’ 33.1%를 웃돌았다(지지통신 2020/07/17).⁸⁹⁾

일본정부는 6월에 도도부현을 걸치는 이동 자제 요청을 해제했다. 이 판단에 대해서는 ‘너무 이르다’가 52.5%로 반수를 넘었다. ‘적절했다’는 37.7%, ‘너무 늦다’는 4.0%였다(지지통신 2020/07/17).⁹⁰⁾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 26.0%, 입헌 민주당 3.3%, 공명당 2.8%, 일본유신회 2.2% 등이었고 특징은 ‘지지 정당 없음’이 60.5%에 달한 것이다(지지통신 2020/07/17).⁹¹⁾

세계 주요국의 지도자에 대한 지지율은 코로나19 감염 이전보다 상승했다(PRESIDENT ON LINE 2020/04/17).⁹²⁾ 주요국에서 지지율이 떨어진 지도자는 일본의 아베총리와 “어차피 다 언젠가는 죽는다”, “가벼운 감기”라고 하면서 모든 대책을 거부하고 있는 자일 보소라노 브라질 대통령뿐이다(PRESIDENT ON LINE 2020/04/17).⁹³⁾

이런 상황은 아베총리가 중의원을 2020년 가을에 해산해서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2020년 6월17일 정국회 폐막과 맞물려 정치권에서는 한 때 아베총리가 2020년 가을에 중의원 해산을 단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대두되었다(동양경제 ON LINE 2020/07/19).⁹⁴⁾

코로나 대책의 미흡함과 아베정권의 파수꾼이었던 검찰 2인자가 내기 마지막으로 사임하는 등 불상사의 연속으로 아베내각 지지율이 급락했다. 결국 1강 체제 붕괴에 따른 구심력 저하에 초조해하는 아베총리가 중의원해산과 총선거라는 승부수를 던질 것이 아니냐는 억측이 확산되었다(동양경제 ON LINE 2020/07/19).⁹⁵⁾

각종 정권 스캔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가운데 6월17일 정국회 폐막되었다. 이후 7월19일 현재 아베내각이 야당들의 임시국회 개최 요구를 계속 무시하는 이유는 국회에서의 야당의 추궁을 비켜가기 위한 작전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동양경제 ON LINE 2020/07/19).⁹⁶⁾

위험 수준에 가까워지는 내각 지지율을 두고 중의원을 가을에 해산한다면 자폭이 될 수도 있는 리스크를 아베총리는 안고 있다. 다만 아베총리에게는 정권의 레임덕 화를

88) 출처: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041701124&g=pol> (검색일: 2020. 07. 25.).

89) 출처: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041701124&g=pol> (검색일: 2020. 07. 25.).

90) 출처: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041701124&g=pol> (검색일: 2020. 07. 25.).

91) 출처: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041701124&g=pol> (검색일: 2020. 07. 25.).

92) 출처: <https://president.jp/articles/-/34684> (검색일: 2020. 07. 25.).

93) 출처: <https://president.jp/articles/-/34684> (검색일: 2020. 07. 25.).

94) 출처: <https://toyokeizai.net/articles/-/355268> (검색일: 2020. 07. 25.).

95) 출처: <https://toyokeizai.net/articles/-/355268> (검색일: 2020. 07. 25.).

96) 출처: <https://toyokeizai.net/articles/-/355268> (검색일: 2020. 07. 25.).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중의원해산, 총선거라고 할 수 있다(동양경제 ON LINE 2020/07/19).⁹⁷⁾

아베총리는 몇 가지 스캔들을 안으면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했다. 그러므로 아베총리는 스캔들에 대한 대처를 중심으로 정치를 했는데 그 와중에 코로나19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릴라들의 공격을 받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지지율의 급락을 맞이했다.

그런데 2020년 7월초에 지금 총선거를 하면 자민당은 66의석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일간 젠다이 디지털 2020/07/03).⁹⁸⁾ 아베 총리가 해산총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고위 관계자의 발언으로 알려진 메모가 나돌아 자민당 내에 충격이 일었다(일간 젠다이 디지털 2020/07/03).⁹⁹⁾

메모에는 '6월 하순에 자민당이 극비리에 실시한 차기 중의원 선거의 정세 조사에서 현시점에서 총선거를 실시할 경우 자민당은 66의석을 잃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를 시모무라(下村) 선대위원장이 보고하자 아베총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일간 젠다이 디지털 2020/07/03).¹⁰⁰⁾

자민당이 중의원의 현행 284의석에서 66의석을 잃는다면 218의석이 되어, 중의원에서의 단독 과반수인 233의석을 크게 밀돈다. 연립여당을 이루는 공명당의 30여 의석을 합해도 겨우 과반수를 넘겨 아베총리의 목표인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310의석)에는 크게 못 미친다.

현재 아베내각은 진퇴양난의 최대위기를 맞이했다.

VI. 맺음말

아베정권은 코로나19 대책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봉쇄, 클러스터 대책, 긴급사태선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시하다가 2020년 7월 19일 현재 주요국들의 평균적인 대책인 PCR검사 확대에 대책을 변경했다. 아베정권은 PCR검사 확대에 반대해 온 '전범' 전문가회의를 폐지해 정부주도의 코로나19 대책으로 프레임을 변경했다.

97) 출처: <https://toyokeizai.net/articles/-/355268> (검색일: 2020. 07. 25.).

98) 출처: <https://news.nifty.com/article/domestic/government/12136-715779/> (검색일: 2020. 07. 25.).

99) 출처: <https://news.nifty.com/article/domestic/government/12136-715779/> (검색일: 2020. 07. 25.).

100) 출처: <https://news.nifty.com/article/domestic/government/12136-715779/> (검색일: 2020. 07. 25.).

아베정권은 5월 25일 긴급사태선언을 전국적으로 해제해 경제활동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후 감염이 다시 확대되었고 7월 중순에는 감염수자가 4월의 상황을 추월했다. 그렇지만 4월과 비교할 때 중증환자가 많지 않으므로 아베정권은 다시 긴급사태선언을 선포하기보다 경제활동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나가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여행에서의 소비나 음식점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아베정권은 도쿄를 제외하여 전국적으로 ‘Go To Travel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런 경제활동의 단계적 재개가 감염의 확대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경제활동과 코로나19 대책을 양립시킬 생각이다.

아베총리는 각종 스캔들에 대한 대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정치적 행보를 보여 코로나19 대책에는 미흡했고 스캔들을 막는데도 실패했기 때문에 4월 이후 아베내각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여 ‘지지하지 않는다’가 지지율을 크게 웃돌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맞이해 방어와 공격 면에서 미흡한 아베정권은 2020년 가을에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계획 중이라는 보도가 있으나 해산 총선거의 결과는 자민당의 참패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2020년 8월 10일 현재 아베정권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최고지휘관 아베총리는 코로나19 대책 미흡으로 패장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



- 호사카유지. 2002. 일본제국주의의 민족동화정책 분석. J&C.
- 교도통신
- 니혼케이자이신문
- 데일리신초
- 동양경제 ON LINE
- 로이터통신
- 류추뉴스
- 마이니치신문
- 마이니치신문 코로나 사이트
- 수상관저
- 시즈오카뉴스SBS
- 아사히신문
- 야후뉴스
- 의료유신
- 일간 겐다이 디지털
- 조선일보
- 주간 아사히
- 지지통신
- AMEMA TIMES
- Bloomberg 통신
- FLASH
- FNNプライムオンライン
- FNN프라임 온라인
- GemMed
- HUFFPOST
- JJI.com,
- MIT technologyreview

- News Week 일본판
 - NewsSocra
 - NHK 뉴스
 - NHK특설사이트
 - nippon.com
 - PRESIDENT ON LIME
 - Science Portal China
 - TRAICY
 - 幻冬社ON LINE
-
- 일본 통계국 <http://www.stat.go.jp>
 -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

● 투고일: 2020.07.19. ● 심사일: 2020.07.20. ● 게재확정일: 2020.08.15.

| Abstract |

Japan's New Corona Virus Policies from the Security Perspective

Hosaka Yuji (Sejong University)

The Abe administration has been carrying out the Entry restrictions policy, the Cluster policy, and the Social distancing policy with the declaration of emergency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new Corona virus (COVID-19). The Abe administration, which had not conducted sufficient virus tests, changed its policy in July to expand the virus tests. The Abe administration declared the Emergency Declaration on April 7 and requested people to stay at their own homes as long as possible. The Emergency Declaration had a certain effect so the Abe administration unlocked it on May 25 and allowed people various economic activities. Since then, the infection has expanded again, but there are not many serious patients, so the Abe administration plans to gradually expand the scope of its economic activities. To promote consumption in travels and restaurants, the Abe administration has launched a nationwide 'GO TO campaign', excluding Tokyo. The prime minister Abe repeatedly failed to deal with the new Corona virus because he considered his several scandals as top priorities. That is why the opinion polls show the approval ratings for Abe's cabinet continues to fall. Against the invisible enemy, the new Corona virus, the Abe administration has failed in terms of defense and attack. Therefore, rumors have begun to come out that the Abe administration would dissolve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conduct a general election in 2020.

<Key words> COVID-19, Entry restrictions, Cluster, Emergency Declaration, Virus tests